

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론 제기...대상 확대 가능성

형평성 논란 휘말릴 이유 없어 대권주자들도 찬반 엇갈려 선별 지급하되 범위 절충될 듯

7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득 하위 80% 재난 지원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론이 다시 제기됐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재정 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역시 을지로위 소속인 이동주 의원이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카드사 배 불리기"라며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

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는데 기재부는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아는 걸 기재부만 모른다"고 했다.

현재의 하위 80% 지급안은 당정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인 만큼, 이제 '국회의 시간'임을 내세워 애초 당이 추진하던 전 국민 지급으로 뒤집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지원하는 데만 42억 10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특히 예비경선을 벌이는 대권주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내 논쟁이 첨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날밤 TV토론에서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정세균·박용진·양승조·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찬반이 5대3으로 갈렸다.

다만 박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게 낫다"며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지원되고 일 열심히 하는 맞벌이가 소외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20만원 지급론'에 "이재명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선별 지급은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넓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식으로 추가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의 형평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

위가 90%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은 받지 않는

선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원이 (소득 상위) 6%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권교체 필요성 공감”...윤석열·안철수 첫 회동

정책적 연대·협력 논의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회동을 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정권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윤 전 총장 측 김기흥 부대변인과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정치, 경제, 외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나누고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탈원전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을 같이했다. 또한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해 야권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고 이념을 넘어 실용 정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만나기로 하고 정책적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은 안 대표의 야권통합 정신과 헌신으로 서울시장 선거 압세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 안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적 결단에 각각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의 중요한 한 분인 안 대표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본적으로 확실한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

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논의했다'라는 물음에 안 대표는 "특별히 여쭙보지는 않았다"며 "정치를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을 들을 부분이 많이 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오전에서는 회동 장소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 대표의 선거 캠프가 있던 건물로 허물고 신축한 건물이라는 점도 화제가 됐다.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기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선 캠프를 꾸렸던 곳이어서 초심을 돌이켜볼 기회가 됐다"며 "윤 전 총장에게도 제가 초심을 갖고 고민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輿 언론중재법 심의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 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소위 회의였다. 수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후 2시 개회한 회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부 측 의견, 토론 등을 거쳐 40분 만에 산회했다. 야당 위원들이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문체위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재난 징후 민원 기관장 안전조치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7일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명부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하기 전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행정관청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재난 관련 민원을 보다 책임 있게 다루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최재형 “정치 참여 하겠다”

“나머지 입장은 준비되면 말할 것” 출마선언까지는 시간 걸릴 듯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9일 만의 정치 참여 선언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 참여까지는 하기로 한 것 같다"며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릴까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이 지난달 중도 사퇴한 이후 언론 접촉에 응하면서 대권 도전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전 원장이 대권 출마와 관련한 입장에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상 대권 도전 선언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도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과 원로, 당밖 중도보수 명망가들이 최 전 원장을 '대안주자'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